

##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현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Realizing the 'Right to the City' within the Neo-liberal city:  
The case of the Haechiman Project

황진태\*

도시에 대한 권리의 논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구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도시정부들에서는 법적 요구의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경향은 도덕적 요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 방향을 법적 요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사유해야만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대체할 대안적 도시공간의 생산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주요어: 도시에 대한 권리, 신자유주의 도시, 디자인 서울, 해치맨 프로젝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저는 서울의 도시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 우선 디자인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서울도 이제 디자인을 매개로 문화와 경제를 통합해

격조 높고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을 창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서울은 디자인을 통해 호색 도시에 혼을 불어넣고

\* 서울대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chjt@naver.com)

삶의 윤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세훈, 2007: 12).

“디자인하느라 애들은 굶어요” ,

“호색벽으로 식탁까지 서울은 싫어요” ,

“전사향경을 디자인하다?! 디자인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

“새것만 디자인인가요?”

(하차번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서울시민들이 올린 문구들)

## 1. 서론

길게는 오일쇼크가 끝난 직후인 1980년대부터, 가깝게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들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본유치를 위한 도시 간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Harvey, 1989c; 2008). 그러한 자본유치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도시가 외국인의 눈에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화장(化粧)하는 장소마케팅이 활발히 추진 중이다(Harvey, 1989a). 이러한 경쟁에서 서울도 빠질 수 없다. 1994년 김영삼 전(前)대통령의 세계화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화가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국제무역과 교류의 증대는 세계화 담론을 물적(物的)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상당한 행정권한이 이양되면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한 서울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황진태, 2010a). 2000년대 들어서는 이명박 전(前)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낙후된 공간을 개발하여 해외관광객 유치와 해외투자 유치를 노린 장소마케팅 전략으로 추진되었고,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는 서울의 낙후된 도심 일부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디자인 서울’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과감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마케팅의 전개과정에서 공간은 교환가치

가 우세한 경향을 띠면서 시민이 누려야 할 사용가치의 공간은 약화되거나 주변화된다. 대표적인 예로 근대건축물인 동대문운동장이 헐리고, 디자인 관련 시설과 공원이 들어설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는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허물어지는 것과 더불어 인근에서 영업을 하던 노점상들과 점포상인들이 쫓겨났으며, 획일화된 간판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북촌 거리처럼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간판마저도 강제된 행정력으로 교체되면서 북촌 고유의 장소성은 상실되었다(황진태, 2010a; 김미영, 2010). 다시 말해 도시정부가 도시 생존을 명분으로 해외자본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된 전략들은 도시민을 위한 도시공간을 배제하고, 자본과 이윤을 위한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게 된 것이다(Brenner and Theodore, 2002).

닐 브레너(Neil Brenner)와 피터 마커스(Peter Marcuse)를 비롯한 비판적 지리학자와 사회학자, 도시계획학자들이 중심이 된 신자유주의 도시(neoliberal city) 연구는 신자유주의 도시로서의 서울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들 연구는 신자유주의를 단일하고, 완결된 프로젝트로 파악하는 기존의 지배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각 국가, 도시의 지리적, 역사적 맥락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도시(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city)”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 관점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도시로서 서울의 형성에는 단순히 초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서울을 조건 짓는 지리적, 역사적 맥락들과 지역 행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황진태, 2010a).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지리적, 역사적 맥락성은 신자유주의 도시 이외에 다른 대안 도시를 상상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Scharenberg and Bader, 2009). 도시별로 역사적, 지리적 차이가 어떠한 전 지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자유주의 도시가 만개(滿開)한 상황에서, 최근 서구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은 신자유주의 도시에 대한 대안으로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이하 도시권) 개념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은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도시공간

을 대체하는 사용가치와 공공성을 지향하는 대안적 도시공간을 생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sup>1)</sup> 그리하여 UN-HABITAT와 UNESCO 등의 국제기구와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등의 도시정부들은 도시권을 헌장으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하려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도시권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 도시권에 내재된 해방적 힘(가령, 새로운 도시공간의 생산)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즉 도시권의 두 가지 측면인 도시권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구(legal claim)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moral claim) 중에서 법적 요구의 측면을 보다 강조하게 되면서, 도덕적 요구의 측면은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Mayer, 2009). 필자는 법적 요구의 측면에서 헌장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법적 요구가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알리바이가 아닌 진정 도시민을 위한 제도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덕적 요구로서의 사회운동과 같은 급진적 힘이 법적 요구와 지속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위치시켜 도시권을 사유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비판한 해치맨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치맨 프로젝트를 주도한 FF그룹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을 비롯한 공간정책에 있어서 정작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서 인터넷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대표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를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서울시가

1) 아직 국내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소개한 문헌은 드물지만(김용창, 2009; 강현수, 2009, 2010; 황진태, 2010b, 2010c), 용산참사를 계기로 2010년 올 초부터 시작된 ‘도시와 인권’ 세미나 모임은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접근을 고민하고 있다. 2010년 12월 3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도시와 권리, 도시와 정의> 학술문화제는 1년 동안 세미나에서의 고민의 성과물이 발표되었고, 국내에 도시에 대한 권리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첫 공식행사였다.

디자인 서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판과 포스터에 시민들의 의견이 새겨진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문화적 저항을 실천함으로써 디자인 서울 정책을 비판하고, 그 결과 서울시가 디자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 사례연구를 통하여 도시권의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는 독립적으로 구별되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양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유지되어야만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의 생산을 대체할 대안적 도시공간생산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절에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도시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대안적 개념으로 도시권 개념의 의의와 한계를 살핀다. 3절에서는 앞선 이론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치맨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4절에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 연구와 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논문들을 참고하였으며, 1990년대 서울시의 세계도시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 전략수립을 주도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을 인터뷰하고, 사례연구의 초점인 FF그룹의 활동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소개된 것으로는 정보의 제약이 많아서 연구자가 직접 FF그룹의 활동에 참여하고,<sup>2)</sup> 수시로 인터뷰를 가짐으로써 문헌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 2. 이론 논의

### 1) 신자유주의 도시(Neo-liberal city) 연구의 의의와 한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데이비드 하비(David

---

2) FF그룹은 해치맨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정책을 비판한 필자(황진태, 2010d)의 언론기고문을 읽고서, 필자에게 프로젝트 관련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고자 했다. 이러한 FF그룹과 연구자 간의 동일한 문제의식은 이후 필자가 FF그룹과 친밀히 다가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Harvey)는 도시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노동과 자본 각각의 필요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Harvey, 1989c). 노동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일상적 교환과 대체가 가능한 지리적으로 연속된 노동시장 단위로서 도시 스케일이 적절하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윤획득을 위하여 노동자가 필요하며,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거대한 노동시장은 풍부한 산업예비군을 제공하고, 기술발달로 야기된 실업은 산업예비군으로서 임금수준과 실업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과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물리적,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들은 도시의 건조환경을 구성하게 된다. 즉 도시에서 자본과 노동자는 일상의 노동시장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접합하게 된다. 나아가 하비는 미국 대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전후(戰後)부터 1970년대까지는 안정적인 제정과 도시경제의 성장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급에 초점을 맞춘 관리주의적 도시(managerialism city)였다면, 이후 오일쇼크로 시작된 전 지구적인 경제위기로 도시제정과탄과 도시경제의 추락을 직면하면서 도시정부 관료들은 기업가처럼 도시를 경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도시정부는 도시공간을 상품화함으로써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드는 기업가주의 도시(entrepreneurialism city)로 재편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하비의 도시연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도시가 중요하고, 어떻게 도시가 기업가주의 도시 혹은 신자유주의 도시로 재편되었는가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의 연구에 기반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사회학과 도시지리학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이 어떻게 글로벌 스케일로부터 지역 스케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대표적으로 *Antipode*, 2002; *City*, 2005 특집).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연구가 국가의 규제유형(미국의 레이저니즘 또는 영국의 대처리즘)이나 초국가기구의 재편(국제통화기금이 추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신자유주의를 국가나 초국가적인 행위자들이 추진하는 단일하고 완결된 프로젝트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신자유주

의는 홀로 '순수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역사적, 지리적으로 제도적 변환의 특수한 전략들과 이념의 재접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과정이며, 경합하고, 진화하는 경로의존적 산물로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Brenner and Theodore, 2005). 이처럼 실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어떻게 신자유주의가 각 국가, 도시의 상이한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지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실의 올바른 진단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도시 분석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접근은 신자유주의 도시를 과정(process)으로 이해하고, 각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도시와는 다른 궤도의 대안적 도시 논의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Scharenberg and Bader, 2009). 이 때문에 샤펜버그와 베이더는 신자유주의 도시(neo-liberal 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신자유주의 개념(concept)에 의해 지배(dominated)되거나, 통치(governed)되는 도시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Scharenberg and Bader, 2009: 327). 즉 실제 존재하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진단뿐만 아니라, 어떻게 신자유주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에 의해 존재하는 대안도시를 상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서 도시권 개념은 대안도시를 모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 2) 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하여 최근 신자유주의 도시의 형성에 맞선 대안적 개념으로서 도시권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대표적으로 *GeoJournal*, 2002; *City*, 2006; 2009 특집 참조). 도시권을 처음 제창했던 앙리 르페브르(Henry Lefebvre)는 도시권을 다른 권리들보다 상위의 권리이며, 작품(oeuvre)의 권리, 참여(participation)의 권리, 전유(appropriation)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Lefebvre, 1996). 작품으로서 권리란 본래 도시는 그 자체가 작품이며, 공공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참여의 장소이자 제품이 교환되는 시장보다는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곳이었는데 자본주의 도시가 형

성되면서 사용가치보다 교환가치가 우세해지면서 공공성과 참여가 사라지게 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들의 가치를 복원하는 권리를 일컫는다. 작품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권리들이 긴밀히 연동된다. 참여의 권리는 도시공간의 생산을 둘러싼 과정에 시민들이 집합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전유의 권리는 사적 소유권과 대립되어 교환가치 보다 사용가치가 우선되는 도시공간을 생산할 권리다. 르페브르의 *The right to the city*가 출판되었던 당시는 시기적으로 프랑스 68혁명과 절묘하게 겹쳐졌고, 혁명 참가자들은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담긴 급진성에 매료되어 열광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도시권 개념이 다시 주목 받게 된 계기는 단순히 슬로건 때문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의 구조적인 요인들과 결부된다.

앞서 하비의 논의에서 확인했듯이, 케인즈주의와 포디즘에 기반한 국가 스케일에 맞춰졌던 경제시스템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국가로부터 초국적 기구와 도시정부로 상당 부분 권한들이 이양되면서, 자율성을 확보한 도시정부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국가가 더 이상 기본적인 소속감의 원천이 되지 못하고, 도시민으로서 도시에서의 소속감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국가 스케일 상의 동질적 시민권으로는 도시 스케일에서의 차별적인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였다(Holston, 2001; Purcell, 2002). 따라서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도시공간의 생산과정 안에서 시민들이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단순한 거수기(擧手機)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도시공간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맞서서 도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도시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급진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요구다. 요컨대 도시권은 오늘날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도시공간생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보다 자본이 우위를 점하면서 시민들이 주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받게 된 것이다(Purcell, 2002).



이러한 도시권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학술적으로 접근할 때 그의 개념은 복잡하고, 유동적이며, 모호하며, 낙관적인 유토피아적 성향 때문에 개념의 엄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Purcell, 2002; Harvey, 2000; McCann, 2002). 그러나 비판적인 논자들도 르페브르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르페브르의 개념을 교조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열린 개념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연구와 실천 지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르페브르의 도시권에 대한 열린 비판과 발전, 수용, 실천에 동의하지만, 이러한 시도들 중에서 도시권의 제도화에만 초점을 맞춘 경향은 도시권 개념에 내재된 기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 해방적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개혁적 수단으로 추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르페브르의 도시권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moral claim)와 도시권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구(legal claim)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법적 요구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Mayer, 2009). UN-HABITAT와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는 글로벌 수준에서 도시권 현장을 만들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브라질, 캐나다 몬트리올 등 세계 각국의 도시정부에서는 현장을 만들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강현수, 2009). 최근 국내에 도시권을 소개한 문헌에서도 도시권 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과로 주로 국제기구와 도시정부에서 도시권을 현장으로 제도화한 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강현수, 2009: 64~77). 마커스(2009)와 하비(2008)는 도시권의 도덕적 요구는 선(善)과 윤리 그리고 정의의 근본적 원리에 기반한 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되는 법적 요구에 치중하는 것은 부가적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하향적 방식의 권리의 제도화는 도시권을 현존하는 시스템 안으로 포섭되기 위한 요구로 환원되고,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권에 내포된 해방적 힘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Mayer, 2009; Meagher, 2010). 이는 본래 르페브르가 정의했듯이 도시권이

다른 권리들보다 상위 형태의 권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목록에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면서 법적 요구의 범위를 벗어난 권력투쟁, 사회운동의 영역을 간과할 수 있다(Mayer, 2009: 368). 즉 르페브르의 핵심적인 권리인 참여의 권리는 도시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합리화하기 위한 알리바이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형태로 전락되고(황진태, 2008), 전유의 권리는 도시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공간의 생산보다는 이미 생산된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이용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Purcell, 2002). 이처럼 도시권의 개혁적 해석을 경계한 하비는 도시권을 일차적으로는 도시공간에서의 잉여의 생산과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접근권이며, 나아가 도시민 스스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권리로서 단순히 개인의 권리가기보다는 도시공간을 재구성하기 위한 집합적 권력임을 명확히 강조하면서 현재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투쟁들을 단결시킬 슬로건 내지 정치적 이상으로서 도시권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덕적 요구로서의 도시권을 강조한다(Harvey, 2008).

필자는 도시권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법적 요구에 쏠린 현재의 논의 지형에 대한 대안이 법적 요구를 중지하고, 도덕적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도덕적 요구와 법적 요구 간의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 도시권을 사유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그림 1>의 교집합 A의 위치 참조). 예컨대, 수평적 관계를 표방하는 거버넌스 기구는 많은 경우 의사(擬似) 절차적 민주주의를 합리화하는 알리바이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 때문에 도로 과거의 관(government)이 주도하는 하향적 정책결정과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 거버넌스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약함과 강함, 국가권력배분의 집중과 분권의 수준에 달려있다(조명래, 2006)는 점에서 강화된 시민사회의 힘이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면, 전략적으로 거버넌스를 이용한 제도화는 과거의 관주도 결정과정에 비하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밖 사회운동과 저항을 통한 도덕적 요구가 제도 안의 법적 요구와 연동함으

<그림 1> 도시에 대한 권리의 두 가지 측면



로써 거버넌스의 권력구조 내에서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긴밀한 관계를 주창하는 것만으로는 이 두 요구 간의 이상적인 균형에 도달하기 어렵다. 기존 도시권 논의가 법적 요구에 치중하면서 도시권에 내재된 해방적 힘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 논문의 사례연구는 법적 요구보다는 도덕적 요구의 측면을 보다 명확히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둬으로써 두 요구 간의 균형에 도달하고자 한다.

### 3. 사례연구

3절에서는 앞의 이론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비판한 해치맨 프로젝트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자유주의 도시로서의 서울이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고, 신자유주의 도시 서울에 대한 대안적 도시공간생산을 시도하고자 한 해치맨 프로젝트를 살펴

본다.

### 1) 신자유주의 도시 서울의 형성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역할은 1990년대부터 시작된다. 최상위 국토계획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서울의 국제적 기능이 강조되고(199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하에는 서울의 세계도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서울 21세기 연구센터가 설립되고(1992년), 김영삼 전(前)대통령의 세계화 선언(1994년) 등 일련의 움직임에서 보듯이 1990년대부터 서울은 해외자본과 해외인력 유치를 본격화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제3차 계획에서보다 “동북아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한다. 2002년에 취임한 이명박 전(前)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통하여 해외자본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마케팅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계천 인근에서 영업을 하던 노점상인들과 점포상인들과 충돌을 빚었고, 결국 노점상인들과 점포상인들은 도심 밖으로 이동하였다.<sup>3)</sup>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대규모 장소마케팅 전략이 도심쇠퇴지역에서 추진되면서 도시민들의 생존권과 영업권을 주변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도시 형태가 생산되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다. 이처럼 2000년대 신자유주의 도시 형태의 출현은 1990년대의 세계도시 서울에 관한 논의와 차이를 보인다. 1990년대 초부터 서울시의 세계도시 전략을 주도했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말한다.

“(1990년대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세계화를 말로만 하고, 정의가 뭔지도 몰라, 서울시는 21세기 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때 반(反)

3) 노점상인들은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면서 신설동 풍물시장으로 이전되거나 주변으로 흩어졌다. 입점상인들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가든파이브로 이전했다.

세계화에 대한 논의를 벌써 했어요. 너무 이렇게 나가면 세계화의 그늘이 뿜냐. 우리가 계속 햇빛만 볼 수 없다. 그래서 1단계 사업(당시 서울의 세계도시 전략 구상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칭함 — 인용자주)에서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하고, 2단계에서는 형평성, 남북통일 후 대비 등. 분야 별로 상당히 많았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인터뷰, 2009년 10월 9 일).

적어도 1990년대 초기만 하더라도 세계도시 서울에 관한 논의는 세계화의 부작용까지 인식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서울시에서의 내부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의 생산이 본격화 되었다. 2006년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그는 2007년 디자인총괄본부(부시장급 본부장을 외부에서 영입)를 신설하고,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지향하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디자인 서울 정책의 몇 가지 예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을 헐고, 노점상인들을 도심에서 쫓아냈으며,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지녔던 북촌 거리의 간판들을 권위적인 방식의 행정력으로 교체하면서 상인들과 충돌하였다. 그리고 거리의 가로판매대를 실용적이지 못한 디자인(예컨대 차양이 짧아서 가판대에 비가 쉽게 들어옴)으로 바꾸면서 상인들과 충돌을 빚기도 하였다. 또한 광화문 광장건설은 일반적으로 광장이 도시민들의 참여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형태로 설계하면서 ‘철학 없는 디자인’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황진태, 2010a; 김미영, 2010). 이 밖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시민사회에서 생태적,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 없이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황진태, 2007). 이처럼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 정책은 오세훈 시장 취임 초기부터 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참여가 부재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 ... 중국이 급속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중국의 상해를 중심으로 도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자칫 서울이 하나의 위성도시로 전락할 수 있”(서울특별시, 2008: 7~9)다는 식의 위기론을 내세우면서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의 생산을 합리화하고 있다.

## 2) 대안적 도시공간생산으로서 해치맨 프로젝트<sup>4)</sup>

2010년 들어서 시기적으로 6·2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언론, 학계,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김미영, 2010). 이러한 디자인 서울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디자인 창작그룹 FF그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 정책에서 정작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을 비판하면서 해치맨 프로젝트(또는 아이라이크서울 캠페인으로 불림)를 기획하게 된다. FF그룹의 창립은 서울대 디자인학부 재학생인 민성훈이 주도했다. 그는 2008년 5월경 디자인 거리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업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후 디자인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세운상가 재개발이나 디자인수도로 서울이 선정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세우게 되었다. 이후 2010년 3월에는 같은 과 출신의 장우석, 최보연과 디자인 관련사업을 하는 조성도와 함께 FF그룹을 결성한다. FF그룹의 핵심목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디자인을 비롯한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봉쇄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추진하는 공간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도시민들은 과연 디자인 서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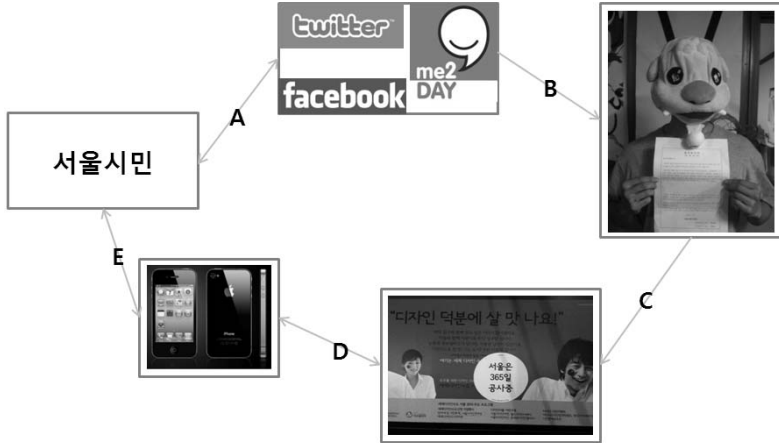
4) 이하 FF그룹의 구체적인 활동 시일에 대한 출처를 따로 밝히지 않은 것은 FF그룹 결성을 주도한 민성훈 씨와의 직접 인터뷰와 이메일 교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해치맨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스티커 캠페인, 두 번째 전략은 디자인서울거리 청소하기, 세 번째 전략은 미술관 전시활동이다. 첫 번째 전략인 스티커 캠페인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FF그룹이 구축한 인터넷 웹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하여 서울시민들로부터 약 150개의 서울시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소감을 문구로 받아서 스티커를 제작하였다(<그림 2>의 A와 B).<sup>5)</sup> FF 그룹 중의 한 명이 해치 가면을 쓴 해치맨<sup>6)</sup>이 되어 서울시의 디자인 서울을 홍보하는 포스터(도심의 대형광고판, 버스, 지하철 등)에 이렇게 만들어진 스티커를 붙였다(<그림 2>의 C). 스티커가 붙어 있는 위치와 사진은 웹사이트에서 위성영상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그림 3> 참조). 스티커 문구의 응모과정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였고, 응모한 시민들은 지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에 붙어 있는 디자인 서울 홍보 포스터에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서는 야간에 버스 차고지를 가야 했는데, 이 과정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시민들도 스티커를 붙일 때의 긴박감을 FF그룹과 공유하고 응원하는 등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다(<그림 2>의 D와 E). 인터넷 생중계를 본 시민 가운데 일부는 생중계에서 스티커가 붙었던 버스에 자신이 직접 가서 확인 사진을 찍어 FF그룹에게 보내면서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긴밀히 공유하게 되었다(민성훈 인터뷰, 2010년 11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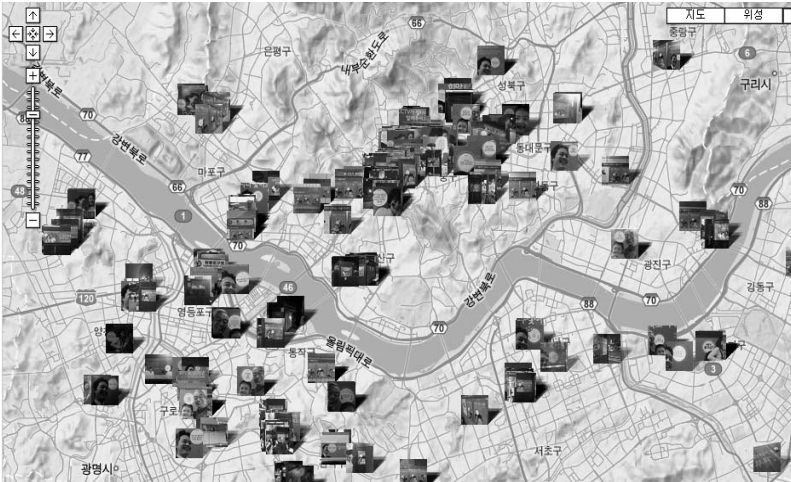
5) 스티커에 들어간 문구로는 “서울은 365일 공사중”, “한강에 나무 좀 그만 뽑으세요, 그들이 하나도 없어요(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비판한 문구 — 인용자주)”, “와! 서울이 서울랜드가 되었어요!”, “서울이 좋은지는 우리가 판단할게요”, “서울은 원래 좋아요” 등이 있다(아이라이크서울 홈페이지 참조).

6) 해치맨은 서울시가 서울의 상징으로 지정한 해치를 희화화한 FF그룹의 마스크 트다.

<그림 2> 스티커 캠페인의 전개과정



<그림 3> 스티커 위치를 나타내는 서울시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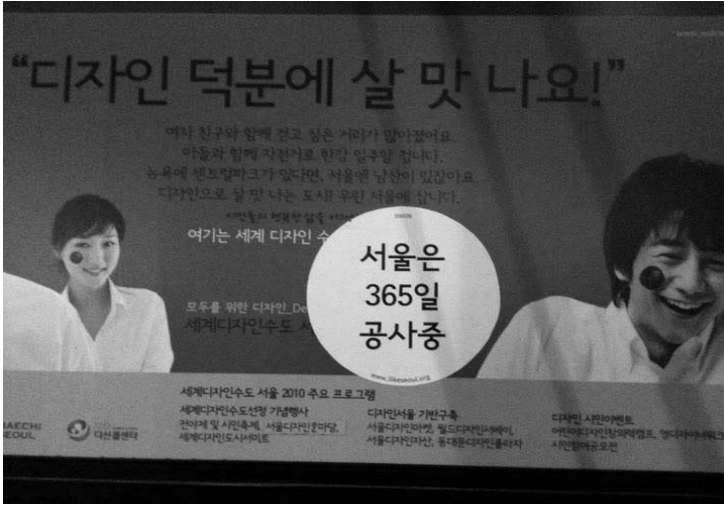
스티커 캠페인을 통하여 도시권의 핵심적인 두 가지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참여의 권리다. FF그룹은 인터넷 상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디자인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정에서 배제된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Evans-Cowley(2010)은 최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시계획가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향하는 도시계획방향(예컨대, 지역에서의 특정 개발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여론화)의 중지를 모아서 도시계획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음을 분석한 바 있다. 해치맨 프로젝트의 경우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후술에서는 현실공간에서의 문화적 저항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유의 권리다. 앞서 강조했듯이 전유의 권리는 단순히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시공간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도시공간을 생산하는 시도는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도시정부와 충돌한다. 다음 <그림 4>에서 보듯이 스티커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의 담론("디자인 덕분에 살맛나요!")과 대립되는 메시지("서울은 365일 공사 중")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붙임으로써,<sup>7)</sup> 기존 담론을 조롱하는 것과 더불어 홍보물이 붙어 있는 신자유주의 도시공간 그 자체를 대항담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생산한다. 스티커 캠페인은 뒤에 소개할 나머지 전략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인 파급력이 가장 강하였다. 이러한 파급력 덕분에 언론<sup>8)</sup>을 통해서 해치맨 프로젝트가 알려지게 되면서 FF그룹은

7) FF그룹의 디자이너들은 기존 홍보포스터와 스티커가 어울리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썼었다고 한다.

8) 《한겨레 신문》, 2010년 5월 20일자에 실린 "'디자인 서울'을 다시 디자인하라: 서울-서울시-서울시민의 삼각관계를 고민하는 디자인학도와 디자이너들"

<그림 4> 서울시 홍보 포스터와 해치맨이 붙인 스티커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와 만나게 된다. 6·2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FF그룹을 만난 서울시 관계자는 해치맨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과 앞으로의 방침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해치맨이 붙인 스티커는 보이는 대로 떼어내고 있는 중이며, 디자인 서울에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니, 디자인 총괄본부와 해치맨 사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자. 공공 시설물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이니 그 부분은 삼가 달라. 아니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민성훈 씨로부터 받은 대화록 중에서).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FF그룹의

---

기사를 읽고서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FF그룹으로 연락하였다(민성훈 인터뷰, 11월 28일).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공간의 점유는 기존 도시공간의 생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도시정부의 반격(스티커 떼어내기, 법적 대응 언급)과 더불어 도시정부도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초를 끌어냈다("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반응에 FF그룹은 공공시설에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sup>9)</sup> 대신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광고 시설물 중 몇 개를 할애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FF그룹은 서울시 관계자와의 만남 이후 불법적인 형태의 해치맨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합법적인 형태로 해치맨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전략인 디자인서울 거리 청소하기다. 이 전략은 시민들이 제안한 문구를 서울시가 지정한 디자인서울 거리에서 먼지, 얼룩으로 지저분한 부분에다가 시민들의 문구가 출력된 종이를 문구대로 구멍을 뚫어서 마치 판화처럼 뚫은 부분을 거리 바닥에 놓고 칫솔과 락스를 이용하여 먼지와 얼룩을 닦아냄으로써 문구를 남기는 합법적 전략이다(<그림 5> 참조). 이 전략은 스티커 캠페인이 야기한 서울시의 사법적 반격을 피하는 동시에 디자인서울 정책으로 생산된 디자인서울 거리를 점유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거리 한복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을 때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인적이 드문 야간에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았고,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 작업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sup>10)</sup>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미술관 전시활동이다. FF그룹은 6월 2일 지방선거일 투표 개표시간에 맞춰 인사미술공간에서 <디자인 올림픽에는 금메달이 없다> 행사를 개막하였다. 이 전시에서는 스티커 캠페인과 디자인서울 거리 청소하기를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응모되었던 스티커 문구와 활동일지를 전시하였다. 서울시장 연임을 노린 오세훈 시

9) 아이라이크서울 홈페이지에는 해치맨 프로젝트를 “비공식 불법 디자인서울 캠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10) 보통 하나의 문구를 작업하는 데 30여 분이 걸리며, 작업은 새벽에 끝났다.

<그림 5> 혜화역 1번 출구 맥도날드 앞 길바닥에 새겨진 문구



장의 디자인 서울 정책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지방선거일에 맞춘 것이다.

6월 2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FF그룹을 소환한다. 해치맨 프로젝트 전략 중의 하나인 스티커 캠페인이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타격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경찰 소환은 FF그룹 구성원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합법적 캠페인인 청소작업을 2주 동안 했었다. 이후 FF그룹을 소환했다는 언론보도로 야기될 여론을 의식한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FF그룹의 소환은

서울시와 관계가 없다고 밝혔고, 경찰청도 서울시의 고발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수사는 곧 종료되었다. 이처럼 서울시가 언론보도에 민감했던 이유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예상과 달리 가까스로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서, 선거기간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았던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수정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인 서울 정책을 비판한 FF그룹의 활동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는 것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로 인하여 디자인총괄본부는 해체되고, 대신 행정1부시장 산하에 문화관광디자인부로 개편되었고, 2008년부터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서울디자인올림픽도 2010년에는 서울디자인한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소규모로 개최되었다(강현주, 2010). 또한 FF그룹이 요구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서울시는 디자인서울홈페이지에 '디자인서울토론폰방'을 만들게 된다.<sup>11)</sup> 이러한 결과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디자인을 비롯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FF그룹의 해치맨 프로젝트 활동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미약하나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는 사실은 도덕적 요구로서 도시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도시에서 대안적 도시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시권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정책을 비판하는 해치맨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FF그룹은 디자인을 비롯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1) 서울시는 디자인서울토론폰방을 만든 사실을 FF그룹에게 알렸다(《주간한국》, 2010.6.10).

공간정책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었음을 비판하면서 인터넷 상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판에 시민들의 의견이 적혀진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문화적 저항을 펼쳤다. 그 결과 서울시는 FF그룹이 제기한 디자인 추진과정에서 협소하지만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성과(디자인서울토론폰방)를 얻게 된다.

사례연구는 통하여 이론 논의에서 제기하였던 도시권 연구와 실천은 도시권의 두 가지 측면인 도덕적 요구와 법적 요구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그림 1>의 교집합 A). 오세훈 시장 취임 초기부터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을 비롯한 도시계획과정에서 시민들을 철저히 배제시켰기 때문에 제도적 틀 안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FF그룹이 고안한 가상현실에서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현실 공간에서의 스티커 붙이기 등의 기존 신자유주의 생산공간에 대항한 전유의 결합(도덕적 요구)은 제도 안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단초(법적 요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헤치맨 프로젝트의 성과를 필자가 과대평가한다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도시공간에서 시민들이 주변화되고, 장소마케팅에 따른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의 생산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제도 내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안적 도시공간을 생산하고자 하였던 FF그룹의 헤치맨 프로젝트는 지배적 도시공간에 미묘한 균열을 내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고,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균열은 앞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현재 서구 도시에서 진행되기 시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한 도시민들의 도시계획과정의 참여가 앞으로 서울에서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Evans-Cowley, 2010 참조). 앞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권의 이론과 실천의 발전 방향은 법적 요구

로서 도시권의 제도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요구로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횡단하는 사회운동, 문화적 저항도 병행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요구와 법적 요구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위치시켜 도시권을 사유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도시를 대체할 대안도시의 실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 Abstract

Realizing the ‘Right to the City’ within the Neo-liberal city:  
The case of the Haechiman Project

Hwang, Jin-Tae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Right to the City’ have been mainly divided into two claims. One is a legal claim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while the other is a moral claim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 space. Recently, global institutions and city governments have been seek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on a legal claim basis, which can downsize the importance of a moral clai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aechiman project, I problematize the tendency that a legal claim has priority over a moral one since this tendency blocks the possibility of radical reshuffling of the neo-liberal cityscape. Therefore I propose the alternative approach that regards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continuing interaction between a legal claim and a moral claim for the production of the alternative urban space.

Keywords: The Right to the City, Neo-liberal city, Design Seoul Policy,  
Haechiman Project, Social Networking Service



## 참고문헌

- 강현수. 2009. 「‘도시권’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공간과사회》, 32호.
- \_\_\_\_\_. 2010. 「도시공간 누릴 시민권리 빼앗는 대한민국」. 《한겨레》, 2010년 3월 31일자.
- \_\_\_\_\_. 2010. 「디자인서울과 해치맨 프로젝트」. 《연세대학원신문》, 180호.
- 김미영. 2010. 「‘디자인 새마을운동’ 하십니까」. 《한겨레21》, 805호.
- 김용창. 2009. 「물리적 도시재개발에서 도시권으로」. 《창작과비평》, 2009년 여름호.
- 서울특별시. 2008.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06~2019: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 오세훈. 2007.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건축》, 51권 5호.
- 조명래. 2006. 『개발정치와 녹색진보』. 환경과생명.
- 황진태. 2007. 「한강르네상스, 도시계획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강 르네상스, 한강의 미래인가 파괴인가?』 2007년 7월 16일 서울환경연합 주최 토론회자료집.
- \_\_\_\_\_. 2008. 「거버넌스와 직접민주정치의 이중전략 모색」. 《진보평론》, 35호.
- \_\_\_\_\_. 2010a. 「지역성장연합과 스케일의 정치가 세계도시 서울의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파크 프로젝트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b. 「기업가주의적 도시 서울, 그리고 도시권: 데이비드 하비의 논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원신문》, 112호.
- \_\_\_\_\_. 2010c. 「신자유주의 시대의 주거공간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연세대학원신문》, 179호.
- \_\_\_\_\_. 2010d. 「오세훈은 왜 ‘디자인’에 집착하는가?」. 《프레시안》, 2010년 3월 3일자.
- Antipode. 2002. “Special issue.” *Antipode*, 34(3).
- Brenner, N., Theodore, N. 2002. “Cities and the Geographies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Antipode*, 34(3), pp.349~379.
- \_\_\_\_\_. N. 2005. “Neoliberalism and the urban condition.” *City*, 9(1), pp.101~107.
- Brenner, N., Marcuse, P., Mayer, M. 2009. “Cities for people, not for profit.” *City*, 13(2-3), pp.176~184.
- City. 2005. “Special issue.” *City*, 9(1).
- \_\_\_\_\_. 2006. “Special issue.” *City*, 10(3).
- \_\_\_\_\_. 2009. “Special issue.” *City*, 13(2-3).
- Evans-Cowley, J. 2010, “Planning in the age of Facebook: the role of social networking

- in planning processes." *Geojournal*, 75, pp.407~420.
- Geojournal*. 2002. "Special issue." *Geojournal*, 58.
- Harvey, D. 1989a.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An Enquiry into the Origins of Cultural Change*, Blackwell publishing, Malden.
- \_\_\_\_\_. 1989b. *The Urban Experience*, Basil Blackwell, Oxford.
- \_\_\_\_\_. 1989c. "From Managerialism to Entrepreneurialism: The Transformation in Urban Governance in Late Capitalism."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71(1), pp.3~17.
- \_\_\_\_\_. 2000. *Spaces of Hope*. Edinburgh Univ. Press, Edinburgh.
- \_\_\_\_\_. 2008. "The right to the city." *New Left Review*, 53, pp.23~40.
- Holston, J. 2001. "Urban citizenship and globalization." in Scott, A.(ed.),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Marcuse, P. 2009.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13(2-3), pp.185~197.
- Mayer, M. 2009. "The 'Right to the City' in the context of shifting mottos of urban social movements." *City*, 13(2-3), pp.362~374.
- McCann, E. 2002. "Space,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the city: A brief overview." *Geojournal*, 58(2-3), pp.77~79.
- Meagher, S. 2010. "Critical thinking about the Right to the City: Mapping garbage routes." *City*, 14(4), pp.427~433.
- Purcell, M. 2002. "Excavating Lefebvre: The right to the city and its urban politics of the inhabitant." *Geojournal*, 58(2-3), pp.99~108.
- Scharenberg, A., Bader, I. 2009. "Berlin's waterfront site struggle." *City*, 13(2-3), pp.326~335.

#### 참고자료

##### 인터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2009.10.09.

민성훈(FF그룹). 2010.11.28.

##### 웹페이지

아이라이크서울 홈페이지 [ilikeseoul.org](http://ilikeseoul.org)

##### 신문기사

《주간한국》 2010년 6월 10일자. "서울을 시민의 목소리로 디자인하자"

《한겨레》 2010년 5월 20일자. “‘디자인 서울’을 다시 디자인하라: 서울-서울시-서울시민의 삼각관계를 고민하는 디자인학도와 디자이너들”

논문접수일: 2010. 11. 1

논문수정일: 2010. 11. 17

게재확정일: 2010. 11. 19